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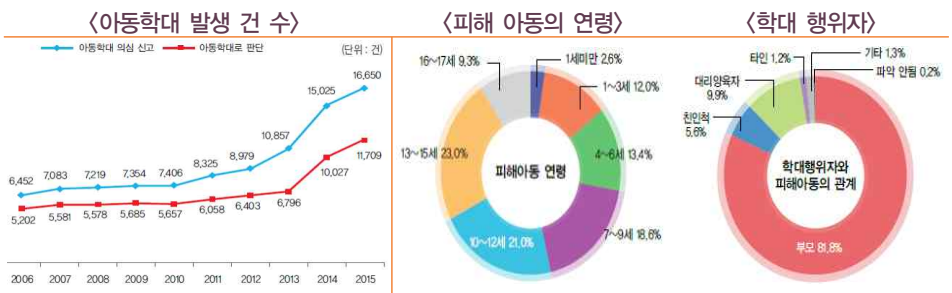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 필요

01 주요 내용

- 5월 5일은 94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로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임
 - 우리나라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었고,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에 부활,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함
- 정부는 지난 2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25년 만에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하였으나,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꼴찌이며, 1위인 네덜란드(94.2점)의 64%에 불과한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분석
- 2012년 이후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보호, 안전, 빈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 대응책이나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하고, 부처 간 업무가 분산되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를 들면 아동학대는 2015년 현재 11,709건 수로 10년 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최근 부천·청주 등 부모학대로 살해된 아동에서 알 수 있듯이 학대 행위자의 81.8%는 아동의 부모로 아동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어린이를 내 아들 낚, 내 딸 낚 하고 자기 물건 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 소파 방정환 -



자료 : (좌)국무총리 주재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 2016.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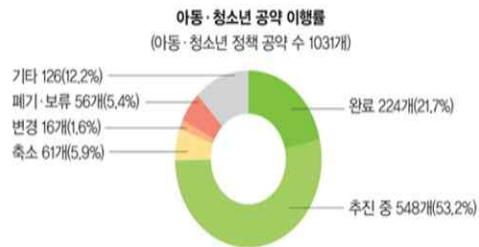
- 2016년 3월 2일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대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가정 보호원칙(제4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 강화(제5조제3항 신설), 가정복귀절차(제16조 1항), 아동보호인프라 강화(제53조항 신설), 시설 보호아동 권익보호 강화(제71조제1호 신설) 명문화

*자료(우)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4.13 총선에서도 아동복지관련 공약은 누리과정 등 보육분야 정책이 대부분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등 정책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남
 -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100% 중앙정부 지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원전책임제’를 강조하고 만 0~2세 영아 보육료,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
 - 국민의당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해결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
 -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1% 상향, 특별교부금 1% 하향’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 보육대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
 -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 상기 법안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새누리당	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재정여건 고려)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0.1%)
더불어민주당	① 보육예산 100%를 중앙정부가 담당 ② 보육료 현실화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민의당	①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② 보육료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③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의당	①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③ 초과 보육 폐지

- 아동에 대한 공약도 빈약하지만 공약 이행률도 21.7%에 불과하여 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19대 국회의 아동 공약 1031개 중 224개가 이행완료되어 이행률은 21.7%
 - 선거는 공공정책이 이슈화되고 실현되는 기본 축이며, 한국의 만 19세 미만 아동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 실현을 스스로 요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완료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최적의 대안



*그림 자료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분야는 소관국 예산의 6.2%에 불과하며, 90.3%가 보육예산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아동보호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 ① 초중고 학교사회사업 전담인력 확충과 사전에 학대 및 폭력 노출 예방 사업 ② 경기도 75개 지역 아동센터에 기능 다양화 및 학습지도 이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기능 강화 ③ 통합된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강화, 치료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과 훈련 ④ 31개 시·군 중 11개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보호를 위해 나머지 지역에도 증설 추진
-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세이버더치ildren 조사(2015. 2) 결과 아동들은 학업스트레스 완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충분한 확보, 농어촌지역에 편의시설 확충, 맘껏 놀 수 있는 공간 확보, 폭력으로부터 보호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줄어드는 아동인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급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의 위험과 함께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에 머무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능동적 노력이 필요

- 경기도 아동인구는 약 238만 명이며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은 18.9%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아동인구 비율의 감소폭도 전국평균보다 크게 나타남*
 - 경기도 아동인구(0~17세)는 총 238만 796명이며, 총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은 18.9%임
 -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24.2%)이며, 오산·용인·김포·남양주·파주도 20%를 초과. 반면 아동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가평·연천·양평·포천 등임

〈표 1〉 경기도 시군별 아동인구 및 아동인구비율

	전국	경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인구	8,893,588	2,380,796	226,378	165,296	75,051	102,162	138,509	64,494	90,102	17,026	126,766
비율	17.2	18.9	19.1	16.9	17.3	17.1	16.3	18.8	19.5	17.4	18.2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인구	188,598	12,142	32,895	133,990	47,067	78,414	54,391	27,897	31,065	212,217	86,846
비율	18.3	17.7	17.7	20.4	22.7	19.7	18.9	17.7	17.8	21.7	20.4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인구	41,029	33,180	74,542	147,929	58,811	40,462	24,489	18,143	6,574	8,493	15,838
비율	19.9	18.4	21.2	24.2	18.7	19.7	15.8	16.3	14.4	13.7	14.6

*자료: 행정자치부('16.3)

(단위: 명,%)

-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타 연령층에 비해 정책적 관심도와 예산비중이 낮은 편임
 - 사회보장사업의 연령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아동예산은 영유아(0~6세) 돌봄 예산을 제외할 경우 전체의 7.2%에 불과('14년 중앙정부 예산 기준)*
 - 지방정부 또한 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타 연령에 비해 낮고, 아동 내에서도 영유아를 제외한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
- 전국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아동권리조례' 2곳(서울시·부천시), '아동친화도시조례' 10곳 등 총 12곳임
 - 서울시는 지난 '12년 전국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16년에는 부천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조례를 제정
 - 해당 조례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는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놀이 및 쉼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참여할 권리 등임

*강해규 외(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표 2〉 전국 자치단체 아동권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아동권리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시(2012)·부천시(2016)	오산시·전주시·충주시·광주 동구·부산 금정구·서울 도봉구(2015) 수원시·음성군·서울 노원구·서울 성북구(2016)

-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변화가 중요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5.20.(금) 13:00~18:00 장 소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최호준홀 주 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접근 ※ 경기복지재단 특별세션 운영 문 의 :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267-9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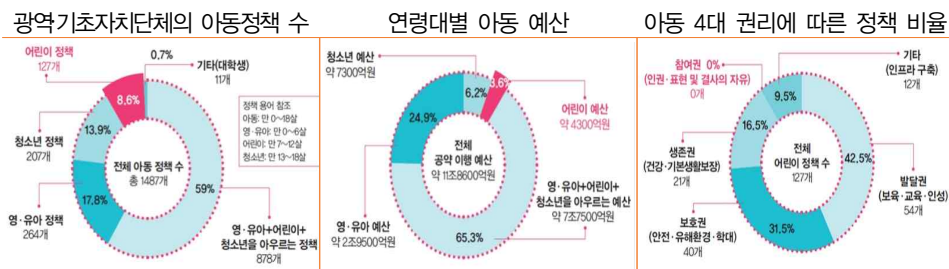
03 FACT CHECK

아동학대, 누구를 위한 신고인가?

-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중 64%가 학대를 ‘못본척’ (동아일보, '16. 05.03.)
 -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 교사와 의사, 아동복지시설 봉사자 등 24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2015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것은 29.3%에 불과
- 이는 신고자의 신원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 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
 - 어린이집의 경우, “소문나면 문 닫아야 한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보게 된 경우 직업상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로 인해 망설이게 되고, 아이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이유
- 학대 징후를 판단하고 가해자로부터 신고자가 방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 소아청소년과 등 병원에 배포해 8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그렇다’ 에 해당하면 ‘신고하라’ 고 권고하고 있지만
 - 학대 징후의 종류, 몇 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으로, 학대 가해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강의 형태 보다는 소그룹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 세미나 형식이 도입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04 통계로 보는 복지

지방정부의 어린이 정책



자료 : 한겨레 21 기사. “국가정책 속 어린이는 나라의 찬밥” (2016.05.04.)

-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은 총 1,487개 이며, 아동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878개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어린이정책은 127개(8.6%)뿐임
 - 아동정책 예산 11조8600억 원 중 영·유아 예산이 2조9500억 원(24.9%)이며, 청소년 예산은 7300억 원(6.2%), 7세~12세의 어린이 예산은 4300억 원(3.6%) 수준
- 어린이 정책을 UN의 아동 4대 권리*로 구분해보면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전무
 - 발달권 정책이 42.5%(54개)로 가장 많고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 순이며,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없고, 권리와 직접 상관없는 전달체계나 법·제도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은 9.5%(12개)
 - 발달권에 관련 정책은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도서관 설립 등이 많고,
 - 보호권 정책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정책 위주이며,
 - 생존권 정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예방 접종 △취약계층 어린이 영양관리 등

* 그림자료: 한겨레21 기사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건강·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유해환경·학대), 발달권(보육·교육·인성), 참여권(인권·표현 및 결사의 자유)

05 해외동향

전 세계의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5.5.)과 어버이날(5.8.)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지정 현황에 대해 살펴봄

- 11월 20일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
 - 1954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같은 날 아동권리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여 캐나다·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 날을 어린이 날로 지정
 -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6월 1일을 어린이날(국제아동절)로 기념 :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
 - 일본의 경우 남자 어린이날과 여자 어린이날이 나뉘어져 있는데, 5월 5일이 남자 어린이날로 법정공휴일인 반면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전 세계의 어린이날 지정 현황〉

날짜	국가 명	날짜	국가 명
1월 11일	튀니지	8월 셋째 주 일요일	아르헨티나
1월 둘째 주 토요일	태국	8월 16일	파라과이
2월 13일	미얀마	8월 셋째 주 일요일	페루
3월 첫째 주 일요일	뉴질랜드	9월 9일	코스타리카
3월 17일	방글라데시	9월 10일	온두라스
4월 4일	홍콩, 대만	9월 20일	독일
4월 5일	팔레스타인	10월 1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스리랑카
4월 12일	볼리비아, 아이티	10월 첫째 주 금요일	싱가포르
4월 23일	터키	10월 첫째 주 수요일	칠레
4월 24일	잠비아	10월 8일	이란
4월 30일	멕시코	10월 12일	브라질
5월 5일	한국, 일본	10월 넷째 주 토요일	호주, 말레이시아
5월 둘째 주 일요일	스페인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5월 17일	노르웨이	11월 11일	크로아티아
5월 27일	나이지리아	11월 14일	인도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헝가리	11월 20일	캐나다 외 22개국
6월 1일	북한, 중국 외 36개국	12월 23일	수단
7월 1일	파키스탄	12월 25일	콩고, 카메룬, 적도 기니, 가봉
7월 셋째 주 일요일	쿠바, 파나마, 베네수엘라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도미니카
7월 23일	인도네시아		

- 어린이날을 두 번 경축하는 나라, 독일
 - 독일은 6월 1일과 9월 20일 두 번에 걸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데 그 이유는 냉전기 동독은 6월 1일을 "국제 아동절"로 지정했고 서독은 9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지정
 - 독일 통일 이후 9월 20일을 독일의 공식적인 어린이날로 지정했지만 동독 지역에는 여전히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기념하는 전통을 고수
- 해마다 주제가 다른 태국의 어린이날
 - 태국의 어린이날은 1월 둘째 주 토요일로, 당일 어린이들의 열차와 지하철 이용, 명소 입장 무료 또는 할인
 - 태국은 해마다 어린이날의 주제를 정하는데 2016년 어린이날의 주제는 '밝은 미래를 열망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 로 선정
- 국가별로 어린이날의 유래와 특징은 상이하나,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존엄성과 자기 삶의 주체성을 고취하려는 목적은 유사
 -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물리적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날을 지정한 본연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의식적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

- 어버이날(어머니날 또는 아버지날)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날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로 5월 8일을 지정
 -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어머니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버이날: 6월 셋째 주 일요일) 등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구분

〈전 세계의 어머니날 · 아버지날 제정 현황〉

	어머니날		아버지날
2월 첫째 주 일요일	코소보	3월 19일	포르투갈, 스페인 외 8개국
2월 둘째 주 일요일	노르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	루마니아
3월 3일	조지아	5월 셋째 주 일요일	통가
3월 8일	아프가니스탄 외 14개국	예수 승천일	독일
사순절 마지막 주 일요일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영국	6월 첫째 주 일요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3월 21일	이집트 외 15개국	6월 5일	덴마크
3월 25일	슬로베니아	6월 둘째 주 일요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4월 7일	아르메니아	6월 셋째 주 일요일	미국, 영국, 중국 외 50여 개국
5월 첫째 주 일요일	스페인 외 7개국	6월 17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5월 10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6월 21일	이집트 외 5개국
5월 둘째 주 일요일	독일, 미국, 중국 외 50여 개국	6월 23일	니카라과, 폴란드
5월 15일	파라과이	6월 마지막 주 일요일	아이티
5월 19일	키르기스스탄	7월 둘째 주 일요일	우루과이
5월 26일	폴란드	7월 마지막 일요일	도미니카 공화국
5월 27일	볼리비아	8월 8일	대만, 몽골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스웨덴, 프랑스 외 7개국	8월 둘째 주 일요일	브라질
5월 30일	니카라과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남수단
6월 둘째 주 일요일	룩셈부르크	9월 첫째 주 일요일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7월 첫째 주 월요일	남수단	9월 둘째 주 일요일	라트비아
8월 12일	태국	9월 셋째 주 일요일	우크라이나
8월 15일	코스타리카	10월 첫째 주 일요일	룩셈부르크
10월 둘째 주 월요일	말라위	11월 둘째 주 일요일	핀란드, 노르웨이 외 4개국
10월 14일	벨라루스	11월 12일	인도네시아
10월 셋째 주 일요일	아르헨티나	12월 5일	태국
12월 8일	파나마	12월 26일	불가리아
12월 22일	인도네시아		

- 미국의 아버지날의 유래
 - 1909년 워싱턴 주의 소노라 스마트 다드는 홀로 6남매를 키운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위한 날을 만들고자 지역 교회, YMCA, 상인들과 정부 관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확산
 - 초기에는 “남성들은 꽃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남성성을 길들이고자 하는 감상적인 시도”라며 어머니날과의 통합 시위가 이어졌으나, 30년대 대공황의 타격을 받은 상인들과 광고 회사들이 아버지날을 상업적으로 이용, 닉슨 대통령에 의해 1972년 연방 공휴일로 제정
- 멕시코의 어머니날 기념행사
 - 멕시코에서는 어머니 날 하루 전 아들과 딸이 부모님 집에 모이는 전통이 있으며 본격적인 어머니날 축하는 5월 10일 당일에 시작되며 성당에서는 특별 미사가 진행
 - 미사의 하이라이트는 ‘Las Mananitas(이른 아침)’ 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전통 음식인 타말레(고기파이)와 아틀레(옥수수차)를 지역의 모든 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
 - 성인이 된 자식은 어머니에게 꽃과 카드를 전달하며 어린 자식의 경우 직접 만든 선물을 전달 학교에 따라서 어머니날 특별 행사를 마련하는데 장기자랑의 형식으로 아동들이 어머니를 위해 노래나 연극 등을 준비하여 선보임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 부양역의 약화 등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통합의 날로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임